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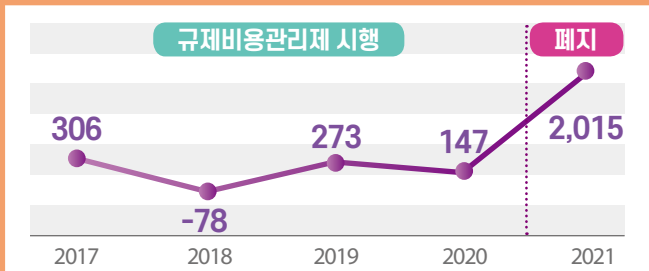
미국 규제비용관리제(2-for-1 Rule) 운영성과와 시사점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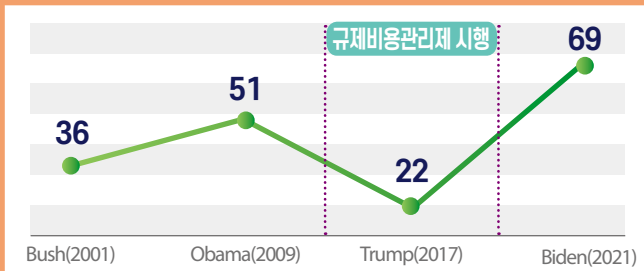
현황

-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비용과 규제수 감축에서 뚜렷한 성과 달성
- ❖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규제비용과 규제수 급증
*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규제비용관리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교체 후 행정명령 폐기로 정책 폐지

연도별 규제비용(억 달러)



정부 1년차 경제적 중요규제 신설건수(건)



시사점

- ❖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교훈 제시

1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및 규제감축 효과

규제신설시
기존규제 2개 폐지,
규제비용 상쇄
(2-for-1 Rule)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3771호를 통해 규제감축 추진

* Executive Order 13771(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규제비용관리제 2-for-1 Rule**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 이상 폐지, 신설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은 기존규제 폐지로 상쇄

트럼프 행정부 2-for-1 Rule 개요

대상

- ❖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 ❖ 생산성, 경쟁, 고용,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절차

- ❖ 부처별 규제신설/폐지계획, 규제비용 절감 목표 제출(OIRA)
- ❖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 할당(Cost Allowance)
- ❖ 부처별 규제신설/ 폐지실적, 비용 절감 실적 공표

계획 미달시 조치

- ❖ 부처별 할당된 규제 비용 초과시 당해연도 규제신설 불가
- ❖ 회계연도말까지 목표달성 불가시 OMB에 목표달성 계획 제출
- ① 목표 미달 이유와 규모 ② 목표달성 일정 및 방법 등

* OIRA(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MB내 규제담당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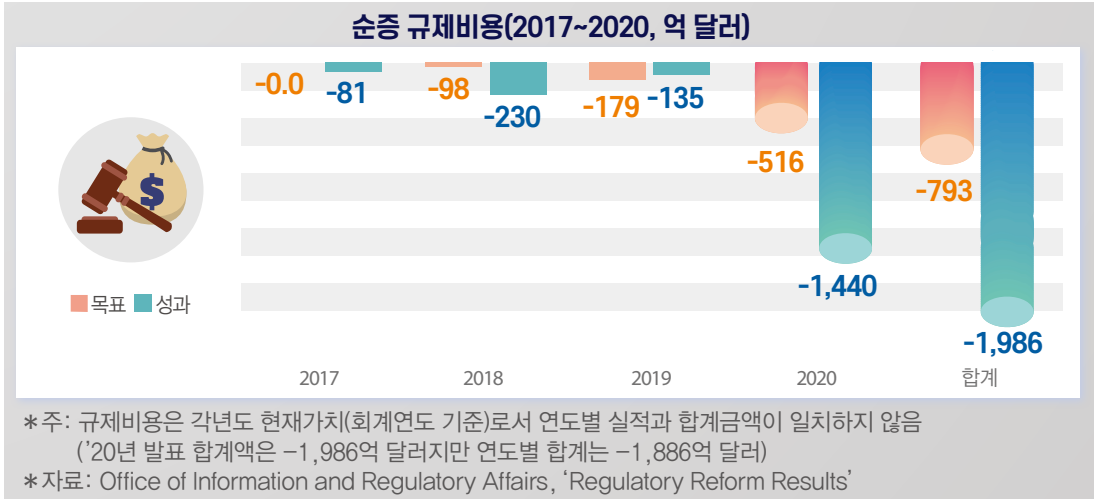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정부기관의 프로그램과 예산정책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

순증 규제비용
목표의 2.5배 달성

'17년~20년 규제수 및 규제비용 감축 목표 초과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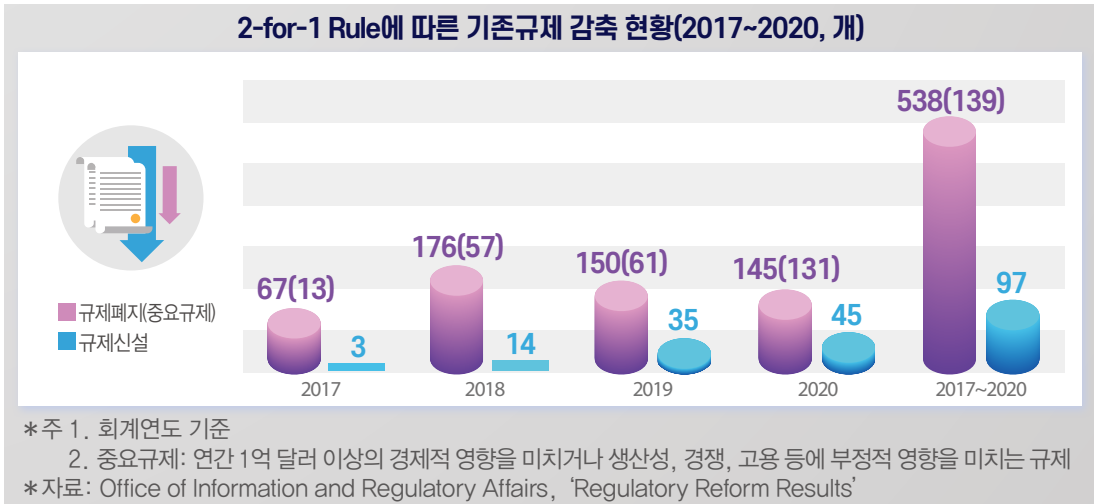
❖ 순증 규제비용 4년간 1,986억 달러 감축, 감축목표의 2.5배 달성

* 순증 규제비용 = 신설규제의 규제비용 - 폐지규제의 규제비용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5.5개 폐지

❖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5.5개(중요규제 1.9개) 폐지로 목표 초과달성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규제비용
급증

2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이후 규제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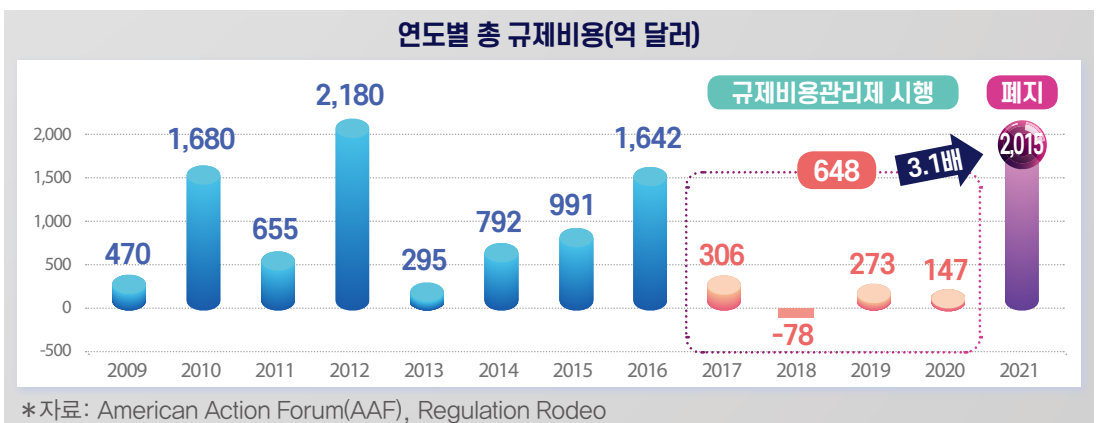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정책전환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감축 정책 근거인 행정명령 13771을 폐지하는 행정명령 13992 발표, 규제강화 정책 추진

* “당면한 긴급한 도전인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들이 강력한 규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해로운 정책들을 폐지” (Executive Order on Revocation of Certain Executive Orders Concerning Federal Regulation, 2021.1.20)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규제비용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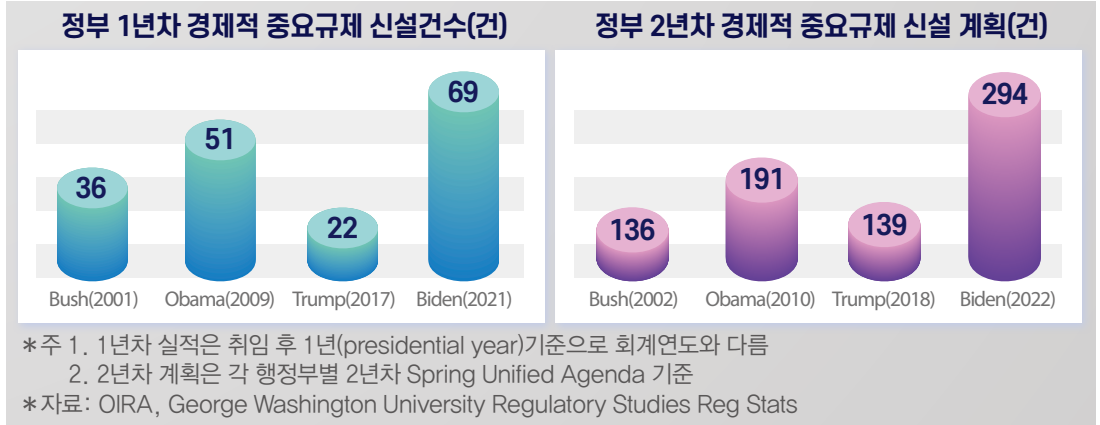
❖ 2021년 총 규제비용은 트럼프 행정부 4년 합계액(648억 달러)의 3.1배



취임 1, 2년차
경제적 중요규제수
트럼프 행정부 대비
2~3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 경제적 중요규제 신설 개수 역대 최대

- ❖ 1년차 신설된 경제적 중요규제수는 역대 행정부 대비 1.4~3.1배
- ❖ 2년차 경제적 중요규제 신설 계획도 역대 행정부 대비 1.5~2.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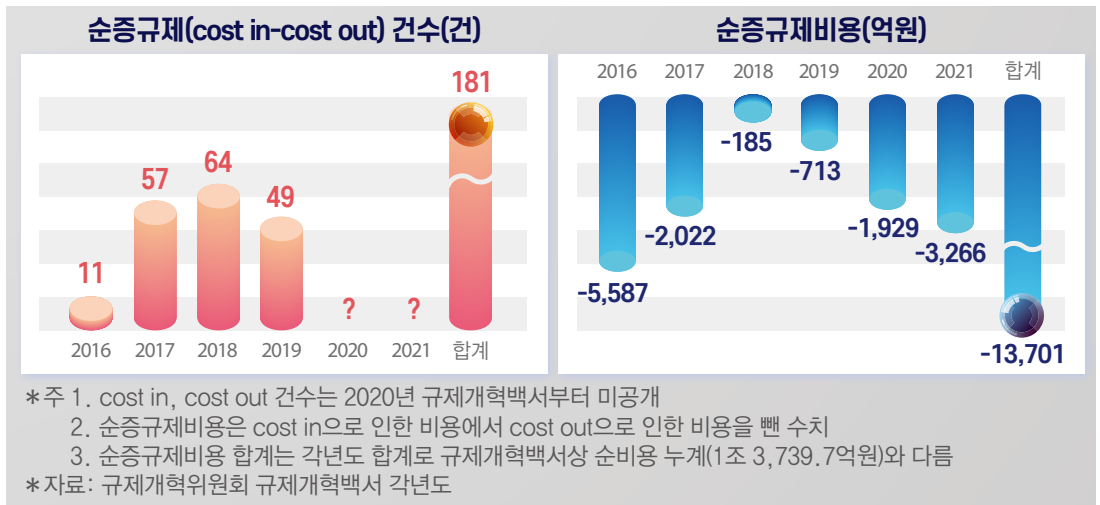


※ [참고] 한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

one-in-one-out
수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중

감축 목표없고,
규제건수는
관리 제외

- ❖ '16년부터 총리훈령으로 one-in-one-out 수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 * 운영근거: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총리 훈령, 2016년 7.19 시행)
 - 규제비용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6년간 1조 3,700억원의 순비용 감축
 - 다만, ①부처별 감축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②규제비용만 관리했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오히려 증가
 - * '16~'19년 동안 신설·강화 규제수(321건)가 폐지·완화 규제수(140건) 대비 2.3배



- ❖ 현정부는 one-in-two-out 수준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개편한다는 계획*
 -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쟁점과 체크포인트

-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감축정책은 비용·수량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에 근거한 결과 다음정부에서 폐기
 - * 각부처 규제개혁 목표를 계량화가 가능한 수량과 비용으로 환산하여 관리
 - * 목표미달시 규제신설 불허, 규제실적 공표 등 행정조치로 강제력을 부여하여 성과 창출
 - * 정권의 철학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지속성 문제 발생
- ✔ 우리도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중이나 총리훈령에 근거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과창출이 제한적, 지속가능성에도 문제 발생 소지
- ✔ 규제비용관리제 개편시 ①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②비용과 규제수 동시 관리 ③목표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부처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마련 필요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Evidence of the Unintended Labor Scheduling Implications of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의 노동시간 변경 효과

By Qiuping Yu, Shawn Mankad, and Masha Shunko '22.6.1



<https://www.cato.org/research-briefs-economic-policy/evidence-unintended-labor-scheduling-implications-minimum-wage>

SUMMARY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캘리포니아주와 인상되지 않았던 텍사스주의 패션 소매점 체인 매장 비교('15~'18, 64개 매장 근로자 5,832명, 매장 전체 및 개별근로자의 노동시간 측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혜자격, 건강보험수혜 자격 상실 발생
- *최저임금 1달러 인상시 매장의 총 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으나 주당 근무인원은 27.7% 증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9.4% 감소(평균매장의 경우 주당 4명 증가, 5시간 감소)
- *평균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혜자격(주당 20시간 초과) 및 건강보험 수혜자격(주당 30시간 초과) 근로자 각각 21.5%, 15.3% 감소

통상 최저임금 인상이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지만 연구 결과는 기업의 노동투입 시간 변화로 근로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

- ❖최저임금 1달러 인상시 근무시간 단축·변동, 수혜자격 감소 등으로 캘리포니아 매장 평균 근로자의 순후생은 이전 대비 약 11.6% 감소



Regulations Imped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Sandboxes Are the Solution: CEI Report

규제가 금융서비스 혁신을 저해; 규제 샌드박스가 해법

Ryan Nabil '22.8.17



https://cei.org/news_releases/regulations-impede-innovation-in-financial-services-regulatory-sandboxes-are-the-solution-cei-report/

SUMMARY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기간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기업과 규제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도구

- ❖금융 서비스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분야이며, 기존 법률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규제 기관이 비정상적, 비전통적인 상품을 어떻게 취급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 출시에 애로
- ❖영국·한국 등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미국도 10개 이상의 주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작
- ❖적절하게 설계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 복지 증진,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가능